박근혜 2회 재판 '초반부터 헛바퀴'

朴측, 증거조사 "일방적 주장" 이의 신청, 재판부 '기각' 결정
朴측, 진행 방식 불만 - 검찰, "중요 부분만 입증 취지 설명"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두번째 재판이 25일 열렸지만 변호인의 거듭된 절차 문제 제기로 오전 공판이 헛바퀴를 돌았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예정된 검찰의 증거조사가 부적절하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증거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전달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검찰은 "실체 진행이 잘 안되고 있다"며 "한정된 시간 내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21분동안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는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 최순실(61)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사건의 공판기록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고영태씨 등의 증언 내용이다.

하지만 재판 초반부터 박 전 대통령 측이 절차상 문제를 주장하며 진행에 순탄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증거 동의 여부를 다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데 반발하며 30여분을 쏟아부었다.

이상철 변호사는 "아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바로 증거조사부터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식으로 이의를 신청한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일반 사건과 같이 하는 것은 제한된 시간에서 무리"라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입증계획 등을 논의하면서 계속 시간이 흐르자 검찰은 "실체 진행이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금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관여한 분들인데 그때 검찰 수사기록을 헌재에 다 보냈다"며 "모두 기록 검토를 마친 걸로 아는데 이 점을 참작해 달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유영하 변호사는 "오해가 있다. 당시 헌재에 제출된 기록이 4만5000쪽이고 삼성, 블랙리스트 등 파악을 못한 게 7만쪽"이라며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 검찰도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의견을 법정에서 제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오전 11시에 가까워서야 증거조사가 시작됐지만 변호인단은 진행 방식에 불만을 터트렸다. 유 변호사는 "검찰에서 자신들이 물은 주신문만 보여주고 반대신문은 생략해 문제가 있다"며 "방청석에 언론이 많은데 검찰 일방 주장만 보도되고 탄핵 진술은 나오지 않아 사실관계가 오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개한 내용은 이 법정에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한 것으로 단순히 검찰이 주장하는 게 아니다"며 "한정된 시간 내 재판을 해야해 중요한 부분만 입증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유 변호사는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추정이 헌법의 기본대원칙"이라며 "시간 관계상이라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는데 재판은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기본 전제"라고 항의했다.

또 변호인은 당초 서증조사 후 한꺼번에 의견을 밝힌다고 했지만, 설명이 끝날 때마다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오전 재판이 마무리된 후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박 전 대통령은 들릴듯 말듯한 목소리로 "나중에…"라며 말을 아꼈다. /뉴시스

한국당, 부인 대작 의혹 제기
이낙연, "심각한 모욕 · 모함"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자유한국당이 제보를 받았다며 부인 김숙희씨의 대필(대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일부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모욕', '모함' 등의 용어를 언급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 시절 대한노인회 관련 법안 발의 및 후원금 수령 논란과 관련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제 인생이 싸그리 짓밟히는 것 같은 참담한 느낌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는 "(후원금을 납부한) 나모씨는 제 고향 초등학교 후배다. 국회의원 첫 당선 때부터 1년에 120만원씩 후원하는 정기 후원자 중 한 명"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된 게 (한 번에) 500만원을 왜 후원했냐는 건데, 선거가 임박해서 액수를 늘린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인 그림 대작(代作)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대단히 심각한 모욕"이라며 "(부인이) 집에서 잠을 안 자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부인 전시회에서 마치 결혼식장 호스트처럼 줄을 선 하객들을 맞이하고, 하객들이 돈 봉투도 내놨다는 제보가 있다는 정 의원의 발언에 "턱도 없는 모함이다. 줄을 선 적도 없고, 대충 30명 선이다. 제보자를 엄선해 달라. 제보의 신빙성이 상당히 위험하다"며 "수익금 절반은 기부했고, 3분의 2는 대관으로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오전 내내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듭되자 여당인 민주당은 이를 방어하는데 화력을 집중하기도 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 검증을 아주 엄밀하고 세밀하게, 치열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사실 확인을 좀 어느 정도는 해야 질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자유한국당의 '제보' 공세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게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라며 "문자로 들어온 얘기는 따로 비공개로 확인하고 어느 정도 그걸 거친 이후 공개 발언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하는 걸 보면 너무 거르는 절차 없이 질문 하는 분도 과하다고 느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렇게 정치 공세하고 인격 모독하면 청문회 원래 취지랑 다르지 않냐"며 "우리가 야당할 때 혹 섭섭했다면 더더욱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악수하는 김동철과 박주선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1차 중앙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주선(가운데) 국회 부의장과 김동철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용호 정책위의장.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 주범은 무연탄 쓴 공장

배출량 중 4만285t(52.5%)이 무연탄… 3만9798t이 제조업 무연탄 연소과정에서 나와

국내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의 절반 이상이 공장 등 제조업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공개한 '201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분석 결과,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 7만6802t 중 4만285t(52.5%)이 무연탄에서 발생했다.

무연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대부분인 3만9798t이 제조업 연소과정에서 나왔다.

국내 최다 초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꼽힌 2곳도 무연탄을 사용하고 있었다. 경북 포항의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부문에서 총 1만3387t, 충남 당진 1차 금속산업 부문에선 1만3333t의 초미세먼지를 각각 배출하고 있었다.

반면 경유차와 건설장비, 농기계 등이 사용하는 경유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1만8866t으로 무연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물론 경유가 에너지원 가운데 무연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초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지만 경유에만 초점을 맞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용득 의원은 "경유값 인상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것으로 새 정부의 공약에는 없는 정책"이라며 "에너지 전반에서 발생하는 환경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 없이 교통부문만 상대가격을 조정할 경우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고 제2의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인 만큼, 에너지 상대가격 논의도 산업부문과 발전부문 등 전 부문에 걸쳐 재논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정읍에서 열려

지방분권 · 자치분권 혁신방안 모색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지평을 연 동학농민혁명의 고장 정읍에서 지방분권과 자치분권 혁신을 통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리고 있다.

'목민관클럽 민선 6기 제20차 정기포럼'이 목민관클럽과 희망제작소, 정읍시 주최·주관으로 25일 시작돼 26일까지 상평동 아크로웨딩타운을 비롯한 정읍시 일원에서 이어진다.

이번 포럼에는 개최 도시 단체장이자 목민관클럽 공동대표이기도 한 김생기 정읍시장을 비롯해 김두관 국회의원, 목민관클럽 고문을 맡고 있는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기획위원인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 민선 6기 지자체장 15명과 토론패널, 관련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 주제는 '지방분권·자치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다!'이다. 새 정부 출범에 즈음, 향후 지방분권과 자치분권 공약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지방분권·자치분권의 혁신방안을 모색·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그간 제기되었던 지방분권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모아 새 정부에 전달하고 현실화 시킨다는 취지다.

포럼 워크숍의 좌장은 박우섭 인천남구청장이 맡았고, 초청 발제는 김두관 국회의원(더문캠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장)이 맡아 '새 정부의 지방분권, 자치분권 공약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과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김윤식 시흥시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들은 각각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조정방안',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권 강화 방안',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성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 관계자, 목민관클럽 회원 단체장들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지방정부의 입법과 행정, 인사, 조직권 등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속에 머물러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근본적인 구조와 기능 개편이 요구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첫날, 워크숍에 앞서 덕천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집결한 참가자들은 기념관에 들러 기획전시 등을 관람하며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과 의미를 되새겼다.

이튿째인 26일에는 신정동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첨단방사선연구소를 둘러보고 내장산둘레길과 내장사를 탐방한다.

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교두보로 부상하고 있는 신정동 연구소를 중심으로 정읍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동학농민혁명 유적과 내장산 등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비롯 정읍의 장점과 매력을 알리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2일 실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청문경과 보고서는 같은달 7일 채택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재벌 저격수', '재벌 저승사자' 등의 수식어를 갖고 있을 정도로 재벌개혁 운동에 앞장 서 온 인물이다.

참여연대 재벌개혁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역임했고, 이 과정에서 공정위 조사국 부활, 집단소송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주장해 왔다. /뉴시스

文공약 '치매 국가책임제' 주목

문재인 정부가 25일 치매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치매 환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을 덜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가치매 책임제'는 ▲치매책임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한 문 대통령의 어르신 핵심 공약중 하나다.

치매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를 확대해 치매 검진을 쉽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치매 조기발견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우리나라 치매 환자수는 72만4000여명으로 추정되며 유병률은 10.2%다.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매년 늘고 있다. 2015년 치매환자 총 관리비용은 13조2000억원에 달했다. 2020년엔 18조8000억원, 2040년에는 63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치매는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경제적인 고통을 안겨 준다. 치매환자 1명에게 들어가는 연간 총 비용은 2015년 기준 약 2033만원. 특히 초기에 적절한 치매 치료와 관리를 못해 중증화되면 부담은 7~8배 늘어난다.

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달 둘째주 중 회의를 열고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구체적 방침과 실천 방안을 결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치매 예방과 검진치료 사업이 강화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뉴시스

국회,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접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5일 국회에 접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에서 김 후보자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평가했다.

사유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기각의견을 낸 것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교원노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고, 전경의 징계로 '영창'을 규정한 전투경찰대 설치법 조항에 대해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청문 자료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차남 명의로 모두 10억7,43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후보자 본인의 재산은 7억4,112만원이었다.

김 후보자는 1979년 12월1일 입대해 1982년 8월31일 육군 대위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2000년 2월22일 육군에 입대해 2002년 4월21일 병장으로, 차남은 2004년 12월14일 육군에 입대해 2006년 12월13일 병장으로 각각 만기 전역했다.

1953년 전북 고창 출신인 김 후보자는 1969년 전남고교를 졸업했으며 1976년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이듬해인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법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2009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11년 사법연수원장에 이어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진보적 인물로 평가 받는 김 후보자는 1974년 당시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에 연루돼 체포되어 64일간 구금된 경력이 있다. 민청학련 사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정권이 선포한 긴급조치 4호(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전국적 민중봉기 획책)에 따라 180명이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유신정권에 의한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으로 꼽힌다. /뉴시스

금융위, 내년 3000억 규모 기업재기지원펀드 운용

금융위원회가 우수한 기술을 갖춘 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펀드를 내년부터 3000억원 규모로 운용하기로 했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를 금융위에서 3000억 규모로 올해 8월까지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운용하기로 하는 계획을 오늘 보고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는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재기지원기업 등이다. 일반 재정에서 1500억원, 정책금융과 민간자금에서 1500억원을 출자해서 총 3000억 규모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수한 기술만 있으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창업 기업에 대한 연대 보증도 폐지될 예정이다. 그는 "금융이 담보대출 위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창업 지원에 나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현행 '창업 이후 5년 내 기업'에서 '창업 이후 7년 내 기업'으로 변경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또 창업 7년이 넘은 기업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 등을 통해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는 "최대한 빨리 시행할 예정이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뉴시스